

2020년 08월(비정기)
www.keei.re.kr

에너지전환 추진현황과 정책 제언



- I.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
- II. 이슈별 에너지전환 현안 진단
- III.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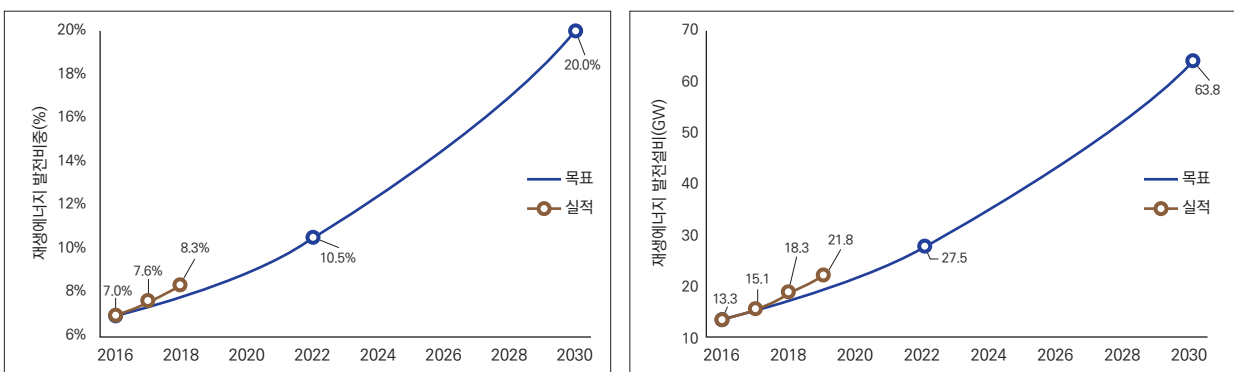
I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

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

▶ 재생에너지 발전, 미세먼지 감축 등 정량적 성과 조기 창출

-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의 초과달성 경로 진입

[그림 1]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및 실적



출처: 한국에너지공단, 「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」(2019년 수치는 잠정치)

- 석탄발전 감축대책의 적극적 추진에 힘입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 3년간 45% 이상 감소

* 석탄발전 미세먼지(PM2.5) 배출 현황: ('16) 30,768톤 → ('19p) 17,072톤

▶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

-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('19.1)

* 전기사업법 개정('18.12)

-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유연탄과 LNG 간 세율 조정('19.4)

* 발전용 유연탄: 36원/kg → 46원/kg, 발전용 LNG: 91.4원/kg → 23원/kg

- '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

*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 개정('19.12):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.4% 감축

▶ 에너지수급구조의 저탄소화 및 효율화 진전

- 1차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·석탄 비중이 감소하고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감소하는 등 저탄소화 진전
-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단위 소폭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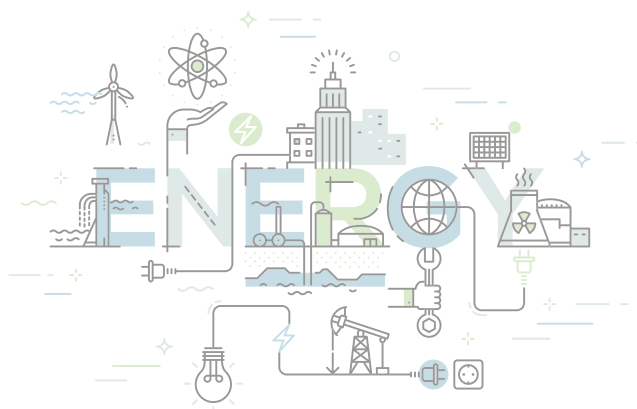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에너지수급구조 변화

구분	2015년	2019년(p)	변화
1차에너지(천toe)	286,932	303,446	연평균 1.4% 증가
석탄	29.8%	27.0%	원자력·석탄 비중 감소 41.9% ↓ 37.3%
석유	38.0%	38.7%	
천연가스	15.2%	17.6%	
수력	0.4%	0.4%	
원자력	12.1%	10.2%	
신재생	4.5%	5.9%	
최종에너지(천toe)	214,974	231,235	연평균 1.8% 증가
석탄	16.2%	13.8%	화석연료 비중 감소 76.2% ↓ 75.5%
석유	49.7%	50.4%	
가스	10.3%	11.3%	
전력	19.3%	19.4%	
열	0.9%	1.1%	
신재생	3.5%	4.0%	
실질GDP(15년 기준, 십억원)	1,658,020	1,848,964	연평균 2.8% 증가
에너지원단위(toe/백만원)	0.173	0.164	연평균 1.3% 감소
1인당에너지소비(toe/인)	5.62	5.87	연평균 1.1% 증가

자료: 에너지경제연구원, 「에너지통계연보」(2019년 수치는 잠정치)

중간점검: 왜 필요한가?

- ➡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지속적 전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점검 필요
 - 이슈별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에너지전환을 지속적·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



II 이슈별 에너지전환 현안 진단

재생에너지 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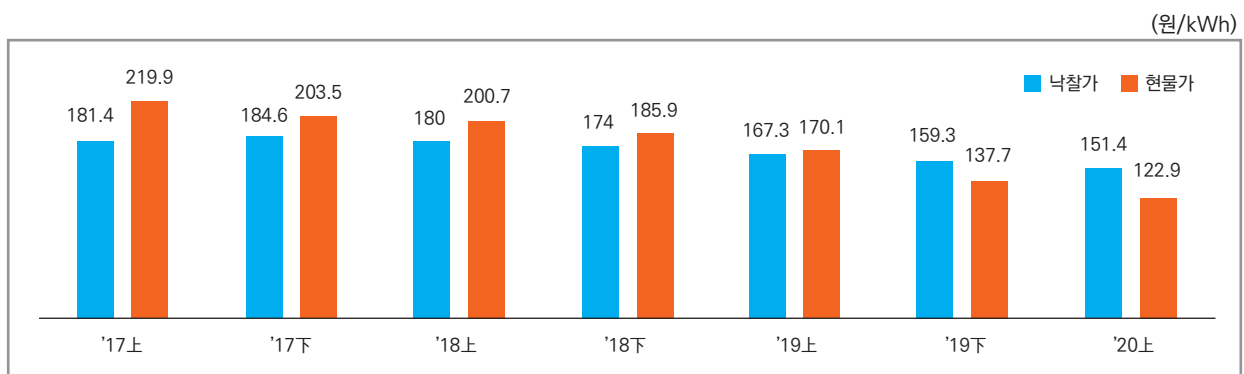
1. 정책 추진현황

- ➡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,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수립
 -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제시('30년 20%, '40년 30~35%)
- ➡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, 분산에너지활성화로드맵 수립 중
 -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('20년 발표예정):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목표 재검토,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
 - * RPS 제도 개선, RE100 등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등
 - 분산에너지활성화로드맵('20년 발표예정): 분산에너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시장기능 강화 방안, 분산에너지 계통 수용성 강화 방안 제시

2. 정책현안

- ➡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나, 원별 균형있는 성과 달성 필요
 - '19년 보급목표 대비 14% 초과 달성하였으나, 풍력 보급실적 개선 필요
 - * 원별 달성률: 태양광 128%, 육상풍력 84%, 해상풍력 17%('19년 잠정치 기준)
 - RPS: '18년 이후 완전이행 단계, '19년 이후 초과 공급 발생
 - 자가용 보급은 보조사업 중심 유지, RE100 등 기업참여사업 미진

[그림 2] 태양광 낙찰가 및 현물가 추이



➡ 현물시장 비중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 대응 필요

- 선정시장 낙찰가와 현물시장 REC 가격 모두 하락 추세이며, 현물시장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
 -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는 '19년 상반기(167.3원/kWh) 대비 '20년 상반기(151.4원/kWh)에 9.5% 하락
 - 현물시장 SMP+REC 가격은 '19년 상반기(170.1원/kWh) 대비 '20년 상반기(122.9원/kWh) 27.7% 하락
- 대규모사업인 수의계약의 경우 타 시장 대비 가격하락이 더딘 편

➡ 글로벌 시장 경쟁심화 및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육성

- 국내 보급 확대에 따라 '18년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내수부문 매출은 증가하였으나, 해외부문 매출감소로 전체 매출은 소폭 하락
 -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및 단가하락에 대응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필요
 - * '17년 대비 '18년 내수부문 매출 11.1% 증가, 수출부문 매출 11.8% 감소
- 에너지원별·밸류체인별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선 필요
 - *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매출액의 65%가 태양광, 태양광 매출액의 67%가 모듈에 집중
- 특히 풍력을 중심으로 국산화율 개선을 통한 보급확산-산업육성 간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

〈표 2〉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매출액 현황

〈신재생에너지원별 매출액〉

구분	2017년		2018년	
	매출액 (억원)	비중 (%)	매출액 (억원)	비중 (%)
태양광	71,645	70.2	64,597	64.8
태양열	167	0.2	165	0.2
풍력	10,759	10.5	12,062	12.1
연료전지	2,831	2.8	4,916	4.9
지열	1,006	1.0	778	0.8
수열	47	0.0	X	X
수력	107	0.1	X	X
바이오	12,508	12.3	13,816	13.9
폐기물	2,964	2.9	3,206	3.2
합계	102,033	100.0	99,671	100.0

〈태양광 밸류체인별 매출액〉

구분	2017년		2018년	
	매출액 (억원)	비중 (%)	매출액 (억원)	비중 (%)
폴리실리콘	15,438	21.5	10,866	16.8
잉곳	X	X	X	X
웨이퍼	2,442	3.4	X	X
태양전지	1,455	2.0	955	1.5
모듈	44,569	62.2	43,190	66.9
장비	518	0.7	619	1.0
전력변환장치	3,012	4.2	3,049	4.7
부품/소재	4,090	5.7	4,106	6.4
집광채광기	X	X	24	0.0
합계	71,645	100.0	64,597	100.0

자료: 한국에너지공단, 「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」

온실가스 감축

1. 정책 추진현황

➡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도출('18.7)

- '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: 536.0백만 톤(BAU 대비 △37%)



-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.7%에서 32.5%로 상향 조정
 - 국내 감축분: 276.5백만 톤(기존 로드맵 대비 57.5백만 톤 추가 감축)
 - * 전환부문 추가감축 잠재량(34.1백만 톤) 포함
 - 그 외 감축분: 38.3백만 톤(산림흡수원 활용, 국외감축 등)
-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'30년 목표를 절대량으로 변경('19.12)
 - * 시행령 제25조①: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.

➡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(LEDs) 검토안 마련('20.2)

-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('17년 국가 배출량 709.1백만 톤 대비 △75%)부터 제5안(△40%)까지 복수안으로 제시
- 탄소중립(Net-zero)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이나, 이를 위해서는 기술·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

2. 정책현안

➡ 2030 로드맵 감축수단의 현실성·적용가능성 검토 문제

- 달성가능성 측면에서 감축수단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, 장기('50년)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필요

➡ 2030 로드맵 상 감축 공백 구체화 및 이행방안 마련

-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바탕으로 전환부문 추가 감축목표(34.1백만 톤)의 합리적 이행방안 마련
 - * 제9차 전기본(WG안): 석탄발전 60기 중 30기(15.3GW) 폐지, 신규 7기(7.3GW) 건설
- CCUS 기반 감축방안(10.3백만 톤), 국제탄소시장(IMM)을 활용한 국외감축 방안(16.2백만 톤) 등 이행방안 구체화
 - * 국제탄소시장(IMM) 규칙 설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

효율 향상 및 신산업 육성

1. 정책 추진현황

➡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,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수립

- 최종에너지소비 절감목표 제시('30년 △14.4%, '40년 △18.6%, BAU 대비)
-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('20년 발표예정): 상위계획의 구체적 이행방안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

➡ EERS 시범사업 추진 및 '20년 기준 에너지절감 목표비율 설정

- 에너지공급자 대상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비율 설정(고시 개정, '19.12)
 - * '20년 절감목표: '18년 판매량 대비 한전 △0.2%, 가스공사 △0.02%, 한남 △0.15%

➡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확충

- AMI, ESS, 수소·전기차 및 충전소 등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확충
- AMI '20년 보급목표 설정(2,250만호), ESS 안전강화대책 마련('19.6), 수소·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추진

2. 정책현안

➡ (산업) 효율향상 투자유인 및 자발적 FEMS 확산 유인 마련

- 기업은 주로 배출권 구입이나 생산량 감소로 온실가스 규제 대응, 직접감축을 위한 효율향상 투자는 감소 추세로 유인 마련 필요
- * 기업의 ETS 대응방법: 배출권구입(44%), 감축투자(33%), 생산감소(28%), 기타(13%)
- 정부 주도 보급 중인 FEMS의 자발적 확산 방안 마련 필요
- * 투자비 부담, 투자회수 불확실성, 사후관리 역량부족 등으로 자발적 확산 미흡

➡ (건물) 기축건물 효율개선 및 고효율제품 이용 유인체계 구축

- 그린리모델링 지원규모 확대 및 건물주 효율향상 동기 마련
- 소비효율등급제, 대기전력저감제도 등은 환경변화 반영해 재정비

➡ (수송) 평균연비제의 지속적 강화 및 新교통 인프라·서비스 확산

-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감안한 '20년 이후 평균연비기준 및 대형차의 평균연비기준 마련 필요

에너지세제 및 가격체계 조정

1. 정책 추진현황

➡ 환경급전을 통한 전원믹스 조정을 목적으로 발전용 연료 세율조정

- 미세먼지 저감·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해 발전용 연료 세제개편('19.4)
- LNG 개별소비세·수입부과금 인하,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
- * 미세먼지 환경비용 비율(약 2:1)만큼 조정: (유연탄 : LNG) 84.8원/kg : 42.6원/kg

〈표 3〉 발전용 연료 세율개편

세제개편 전			세제개편 후		
세목	발전용 유연탄	발전용 LNG	세목	발전용 유연탄	발전용 LNG
개별소비세	36.0원/kg	60.0원/kg	개별소비세	46.0원/kg	12.0원/kg
관세		7.2원/kg	관세		7.2원/kg
수입부담금		24.2원/kg	수입부담금		3.8원/kg
소계(A)	36.0원/kg	91.4원/kg	소계(A)	46.0원/kg	23.0원/kg



➡ 전기요금 체계 개편

- 국정과제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“전기요금체계 개편”을 정책과제로 제시,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 예정

2. 정책현안

➡ 발전용 연료 세제개편과 전원믹스 조정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 마련

- 발전원별 외부비용 내재화에 의한 석탄과 LNG 간 급전순위 조정을 의도하였으나, 현행 세율 수준으로 당초 기대 효과 발생 어려움

* 추정된 외부비용의 50% 수준만 개별소비세 반영

➡ 전기요금 규제의 독립성 확보와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 필요

- 공급비용 변화를 적기에 요금에 탄력적으로 연계하는 체계 구축

*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지연은 ①수요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, ②재생에너지 및 효율향상 자원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하며, ③전력 설비 투자차질 등 전력산업 장기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

석탄발전 축소

1. 정책 추진현황

➡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및 연료 전환

-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대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
 -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(12~2월) 석탄발전 9~14기, 봄철(3월) 석탄발전 22~27기를 가동중단하고, 그 외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80%까지 낮추는 방안 제안('19.10)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건설 예정이었던 9기의 신규 석탄발전기 중 2기(당진에코 1·2호기)를 LNG로 연료 전환

➡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추진

-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: 노후 석탄발전 7기(2.8GW) 폐지계획 발표
 -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: '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및 LNG 대체 계획 발표
 - 계획기간 내 석탄발전 60기 중 30기(15.3GW) 폐지, 신규 7기 건설
- *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(12.7GW)는 LNG 전환

2. 정책현안

➡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

-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분을 회수하기 위해 가구당 월 1,200원 추가 부담 필요(국가기후환경회의)

*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28kWh 기준

- ➡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비용 및 좌초자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
 - 석탄발전소 종사인력 및 해당 지역사회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방안 마련
 -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시 좌초자산화 대응

원전 단계적 감축 및 생태계 육성

1. 정책 추진현황

- ➡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지역·산업 보완대책 추진
 -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,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 발표('17.10)
 - 원전지역·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 병행 추진
- ➡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구축
 - 국내 해체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부품 및 R&D 조기 발주
 - 해체산업 육성과 해체기술 실증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 (2021년 하반기 착공 예정)
- ➡ 국민참여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추진
 -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('16.6)
 -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후 공론화 진행 중
 - 전국 의견수렴 1차 종합토론회 개최
 - 월성 맥스터(MACSTOR) 증설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시행('20. 6-7월)

2. 정책현안

- ➡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한 원전 생태계 및 인력 육성 지원
 - 원자력 관련 미래 유망분야 육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 유지
 - 안전한 원전 운영과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원자력 인력 육성
- ➡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해체산업 육성 추진
 - 생태계기반, 인력, 금융 등 종합지원을 통한 원전해체전문 강소기업 육성
 -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단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- ➡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
 -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(중간저장, 최종처분 등)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 -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설정

III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

에너지소비 저탄소화 및 효율화 추진

- ➡ (산업) R&D, 가격기반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저탄소화
 - 다소비업종(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)은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기반 규제와 수소활용·차세대 공정 R&D 및 실증을 통한 저탄소화 추진
 - 그 외 업종은 전력화 및 소비전력의 탈탄소화에 주력
 - 2030 로드맵 수정안, 2050 LEDS에서 제시된 감축수단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정책 연계성 강화
 - 그린뉴딜,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을 활용한 감축 인센티브 마련 및 투자 유인
- ➡ (수송) 친환경차 보급지원 지속 및 전환 공론화 토대 조성
 - 전기·수소차 및 인프라 보급지원 유지·확대하여 목표달성 동력 유지
 - * '40년 보급목표(제3차 예기본): 전기차 830만대, 수소차 290만대
 - 내연기관차→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
 - * 친환경차 100% 보급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의견수렴기구 마련
- ➡ (효율화) EERS 기반 조성 및 수요관리 정책 이행 강화
 - EERS 지속 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필요
 - 장기절감목표('21~), 목표 이행과 연계한 유인·제재 조치, 비용보전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 -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의 이행 및 환류체계 구축 필요
 -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,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 제시된 부문별 수요관리 정책의 이행과 주기적 평가 필요
- ➡ 수요부문 제도 개선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
 - RE100제도 도입 등 대규모 소비자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제도 개선
 - 소규모 소비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제도 도입
 - * 가상상계제도, 에너지P2P 등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
전환 부문 탈탄소화 가속화

- ➡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RPS 의무비율 상향, 계획입지제도 도입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



- 현행법에서 10%로 제약된 RPS 의무비율 법정 상한 상향, 혹은 폐지
- 계획입지제도, One-Stop-Shop 도입을 통해 해상풍력 등 대단위 부지가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
- 기술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REC 가중치 체계 개편
 - 에너지원간 가격경쟁력 격차 확대에 대응한 가중치 체계 개편
 - 최저효율제, 탄소인증제 등 기술성과 환경성 기준 강화
- (태양광) 경쟁입찰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을 통한 비용·가격 하락 유도,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
 - 경쟁입찰 및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가격하락 및 사업안정성 확보
 - * 선정 시 지역·산업파급효과, 전력계통 운영, 주민수용성 등 정책목표 반영 확대
 - 보급목표를 반영한 입찰물량 배정을 통해 목표 및 REC 수급 관리
- (풍력 등 기타) 수의계약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격검증 프로세스 강화, 장기적으로 경쟁입찰시장으로 이행 검토
- 재생에너지의 급증에 대비한 계통 안정성 강화
- ➡ 발전용 LNG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·장기 전략 마련
 - 안정적 공급 및 수급 변동성을 고려한 LNG 물량의 확보
 - 직수입 확대에 따른 발전시장 가스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
- ➡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정적 활용방안 마련
 -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(건식저장시설)의 적시 구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효과적으로 활용
 -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필요
 - 주기적 안전성 평가(PSR)와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통해 운영 중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

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 구축

- ➡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외부비용평가위원회 구성
 - (3차 예기본)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가격·세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독립기구 구성 제안
- ➡ 비용변동을 전기요금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 구축
 - 현행 총괄원가 규제를 성과·목표와 연동하는 유인규제로 전환
 - 단순히 생산비용에 근거하는 총괄원가 규제 방식 하에서는 새로운 전력산업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
 - 전환부문 탈탄소화 및 에너지소비 효율화 관련 비용을 총괄원가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,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
 - * 전기요금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소비자 대상 서비스 개선 병행
 - 전압별·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소비자의 선택권 확대
- ➡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규제기관 설립

지역에너지통계 구축

▶ 에너지분권화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에너지수급통계 작성

- 기초지자체 에너지수급통계는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지역 단위 에너지전환 추진에 필수적인 기초자료
- 시군구 단위 에너지원별 수급 관련 상세자료의 안정적 수집체계 구축
 - (무연탄) 관세청을 통한 수입처 확보 및 국내 무연탄 생산이후 유통과정 조사를 통해 최종소비 단계까지 통계수집 체계 구축 필요
 - (석유·도시가스·열) 해당기관·회사를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에 필요한 상세정보 제공 의무 강화 필요
- 시군구별 상세 에너지소비 현황자료 수집·검증 및 에너지통계 작성을 위한 인력·자원의 보강

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

▶ 에너지전환 이행 및 복지확충에 전력기금 활용 검토 필요

- 주요국은 전력기금을 재생에너지 보급, 효율향상, 복지확충에 사용
 - * 미국(캘리포니아), 프랑스, 영국, 독일, 일본 등
- 전력기금을 재생에너지 확대, 효율향상 등 에너지전환과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체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
 -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('19.7)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 시 전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
 -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효율향상 사업에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
 - * '19년 기준 여유재원 5.2조원 수준(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잔액 포함)
 - * 포괄보조금(block grants)은 특정된 보조사업 중 유사사업을 블록화하고, 블록 내 포함사업에 대해서는 용도 제한 없이 일정 공식에 입각하여 교부하는 보조금

* 용 어

- AMI(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)
원격검침 인프라
- BAU(Business as Usual)
기준전망
- CCUS(Carbon Capture, Utilization, and Storage)
탄소 포집, 활용 및 저장
- EERS(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)
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
- ESS(Energy Storage System)
에너지저장장치
- ETS(Emission Trading System)
배출권거래제
- FEMS(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)
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
- IMM(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)
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
- LEDS(Long-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)
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
- PSR(Periodic Safety Review)
주기적 안전성 평가
- REC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
-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s)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

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정책 T/F <http://www.keei.re.kr>

문의	선임연구위원	심성희	hsims@keei.re.kr	052)714-2211
	연구위원	김지효	jihyokim@keei.re.kr	052)714-2103

KEEI ENERGY PENDING BRIEF



에너지경제연구원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5-11 | TEL: 052) 714-2114 | <http://www.keei.re.kr>